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 봤더니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았다. 일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주인으로서 얻은 것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고 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연구원에 재직하며 관련 실무를 책임졌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가 최근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 등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맞춰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준2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실시한 두 번째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앞으로 운명은...

날 토론의 테마는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한계’였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 부른 꿈을 안고 출범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연방 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든다는 정부 구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 ‘특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가며 잊히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4명꼴로 특별자치도 출범 배경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인지도는 예상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13-18일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인지도)에 응답자의 59.7%가 ‘인지’라고 답했고 ‘비인지’도 40.3%에 달했다. 더욱이 젊은 층(18-29세)과 학생층이 인지하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6%와 27.6%에 불과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인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관심도에서 도민 54.3%는 ‘관심이 있다’고 답했지만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도 45.7%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인 셈이다. 결국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제도개선’만 수차례 이어질 뿐 도민의 삶의 질은 예전과 별 반 차이가 없다. 때문에 과거처럼 번방으로 다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해 있다. 다시 대권 주자들이 출범선상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을 위해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됐다. 때문에 새로운 후보들은 유사하거나 보다 획기적인 대안을 들고 도민들의 표심을 흔들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취지를 몰라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전국의 1%인 제주를 선거 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역시 선거기간 득표를 위해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약속할 것이다. 도민들은 그들의 약속을 또 믿어야 하나. 그사이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및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의 특별자치단체 설립 움직임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15년간 자치(自治)도 미약하고, 특별한 혜택도 없이 도민들도 도와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기하는 강수(強手)는 악수(惡手)일까, 묘수(妙手)일까.

사설

특별자치도 득과 실, 냉정히 따져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을 맞았다. 이제 적잖은 시간이 흘렀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 아니다. 제주도민 10명중 4명이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배경을 모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잖은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소리 특별기획으로 진행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준2를 준비하다’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비판 일색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도가 주민 참여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자치권이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훨씬 줄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얻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올 것이다. 단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후 부활하려 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서 그렇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가장 중요한 도민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시원찮다고 본다. 얼마전 제주도가 발표한 도민인식 조사에서도 몇몇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로 조사됐다.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 역시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로 거기서 거기다. 당초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약속한 특별자치도의 실상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 제주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잖나.

열린마당

아파트 단지 내 소방출동로 열어 주세요



오춘희 화북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도내에서도 차량 소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특히 야간에 귀가 한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단지 내 도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화재 발생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가 막혀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주차된 차주

에게 전화하기 바쁠 것이고, 이럴 경우 결국 고층화재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화재는 소방차가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또한 화재는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가 소속된 의용소방대에서도 역점시책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지도 및 캠페인을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관리사무실에도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간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뉴스-in

“지방의회 30년 역사 되돌아본다”

지방의회 부활 기념 행사 마련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 도의회는 24일 제16회 제주포럼 의회 세션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공동체 건설-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 개최에 이어, 7월2일엔 권선표 교수 강연회, 7월5일은 도의회 대회의실 역대 의회장을 초청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 좌담수 의장은 “지방의회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이상민기자

농협이 100% 지분을 출자한(주)제주도농협센터 소속 18명으로, 2018년 10월부터 농협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일부 공정을 담당. 양돈농협 노사 관계는 “자회사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해 올 초 이사회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자회사 근로자의 직접고용승계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예래동 안전한 피서환경 계획

○...서귀포시 예래동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1년 예래동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 예래동은 중문색달해수욕장 내 종합상생실 설치 및 총괄지원팀, 안전·질서유지팀, 시민불편해소팀 등 3개팀으로 대응반을 편성해 7-8월 운영할 계획. 강연실 동장은 “중문색달해수욕장과 눈짓물담수욕장에 민간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이용객 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 백금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도정 ‘의지’ 있긴 하나

제주를 견인할 기업 투자유치가 수년째 초라한 ‘성적표’다.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할 확실한 정책 수단임에도 현실은 ‘침침산중’이다. 제주도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투자유치에 의욕적 행보를 얼마큼 보였는지 의문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15년 13억9000만달러로 최고치 이후 2016년 9억7000만달러, 2018년 3억5700만달러, 2020년 3억6300만달러로 내리막길이다. 해외 투자유치건수도 2015년 14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엔 66건에 불과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규제강화에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기업유치 노력에 소극적인 탓이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국내 기업 투자협약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에 그쳤다.

최근 도는 수년간 투자유치 담보상태를 벗어나려 투자진흥지구 신규 기업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급감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지만 ‘뒤틀행정’에다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세수확대에다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침방’ 역할로 지자체의 핵심 과제다. 도정이 기업유치에 일관성없이 규제강화에 몰두하고, 기업인을 불신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 제주 투자유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청정제주’를 살리는 제주형 뉴딜과 연계된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동남아 개도국 대상 투자유치 다변화, 각종 규제강화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 등이 절실하다. 더 중요한 건 도정의 ‘의지’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덕삼(향년 88세, 前 경찰공무원, 국가유공자)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도 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6월 25일
아들 현종학 며느리 김정은
종훈 안성희
딸 현복희 사위 강선일
복래 강명돈
복자 정공철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원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